

美 백악관 닮은 용산 대통령실... '격의없는 소통 공간' 방점

2층 제1집무실, 본 집무실로 사용 대통령·참모진 한 건물서 업무처리 기자실, 백악관 브리핑룸과 같은 구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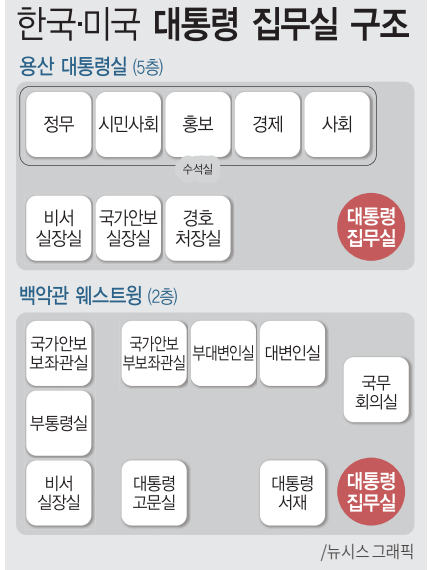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지하버거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1일 만에 '용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며 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집무를 볼 용산 청사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5층에 마련된 제2 집무실을 사용하게 된다. 2층 집무실은 현재 공사 중이며, 내달 마무리 예정이다. 2층 제1집무실을 본 집무실로 쓰고 제2집무실은 보조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기존 청와대의 차이점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의 위치다. 옛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현재 대통령실 청사는 10층으로, 대통령과 참모진이 모두 한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용산 대통령실 내부 구조는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들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화를 나누듯, 윤 대통령도 한 공간속에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현안을 논의하고자 이같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2집무실이 위치한 5층에는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처장실과 정

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수석실이 한 층에 자리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면 참모들과 즉각 대면할 수 있는 구조다. 집무실에 놓인 원형 탁자 역시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다만 리모델링이 아직 진행 중이라 곳곳에 바다 보호재가 깔리거나 자재가 드나드는 등 공사가 한



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일 자리했고, 2관에는 민정·경제·일자리수석실이, 3관에는 외교안보·국민소통수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울러 기자실도 청와대와 다르다. 이전 청와대 기자실은 집무실과 별도 건물인 '춘추관'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은 '국민소통관'으로 기자실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한 건물에 있다.

현재 임시 브리핑룸으로 운영 중이지만, 일체형 책걸상을 한 줄에 7개씩 7줄을 배치해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과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1층 브리핑룸으로 자주 내려가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출근길도 자연스럽게 공개돼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즉석 질문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스마트폰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내부 촬영을 할 수 없도록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과반 승리' 노리는 여야... 충청 등 승부처

與,尹정부 국정운영 동력 발판 마련 野, 정부 견제 차원서 지방선거 집중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모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 모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9곳 이상 차지하는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남(부산·울산·경남·경

북·대구), 민주당의 경우 호남(전남·전북·광주)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는 양상이다. 두 곳 모두 양측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인 만큼, 접전 없이 각각 공천받은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접전인 곳도 있다. 먼저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이력이 있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인 이시종 충북 지사를 대신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도전했다. 나머지 3곳은 현직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김영환(충북지사)·최민호(세종시) 후보가 도전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 충청권

득표율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세종만 제외하고 대전·충남·충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앞섰다. 민주당이 2010·2014·2018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곳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인천·경기 지역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양상이다. 먼저 인천시장은 유정복 국민의힘·박남춘 민주당·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도전한 상태. 이 가운데 박남춘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재선에 도전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박남춘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설욕전을 노리고 있다.

경기지사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경쟁 중이다. 제주지사 선거는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와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직 상실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주출) 무소속 의원(사진)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업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 별개로, 지역구인 전북 전주출은 다음 달 1일 있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올해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를 지역구 재선거는 11개월 뒤인 내년 4월 5일에 열려 당분간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거론됐고, 창업주로 활동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설명하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경선 운동한 혐의, 책자 등 기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일반당원과 관리당원에 중부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15만여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영훈 기자

권영세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뒤집지 않을 것"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본질회에서 "'애니씽 버트 문재인(Anything But, 문재인)'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정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입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 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화두(話頭) 중 하나"

라고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